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25. 12. 19.) 속기록(의결본)

발언자	의결본(최종)
박명호위원장	<p>오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참석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하고 송헌재 교수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좀 늦으시니까 시작을 한 다음에.</p> <p>그리고 기존의 회의 관례처럼 먼저 발표를 먼저 하고, 논의를 한 후,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지금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회의 시간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는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좀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하시는데, 발표 시간은 각 25분씩입니다.</p> <p>오늘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희원 위원님하고, KDI의 이승희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희원 위원님께서 먼저 25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논의는 저희가 한 분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셔서, 세 분 정도 질의를 받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p>
유희원위원	<p>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연구원에 유희원입니다.</p> <p>다 만들고 나니까 발제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최대한 넘어갈 부분 넘어가고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일단 오늘 주제가 걱정 노후소득보장 방안과 관련된 거라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과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좀 평소에 연구해 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p> <p>그래서 목차는 과제와 대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p> <p>먼저 이 걱정성 담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p> <p>먼저 간단한 현황을 보시면, 한국 노인의 불안정한 삶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인빈곤율이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래서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신 이제 전기 노인의 빈곤율은 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p> <p>그런데 이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전기 노인의 빈곤율이 국민연금이 성숙해 가고 또 기초연금이 도입된 뒤에 확대되어 왔고, 또 노인의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전기 노인의 빈곤율 역시 OECD 평균보다는 높고, 또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은퇴하고 난 뒤에 좀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 이분들 역시도 그 후기 노인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는 추종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p> <p>그 다음에 노인의 빈곤율과 전체 인구의 빈곤율 격차를 보시면, OECD 평균이 한 3.3%p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제 한 25%p 정도 됩니다.</p> <p>이건 결국 노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곤의 양뿐만 아니라 어떤 질적인 측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좀 문제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고요.</p> <p>그다음에 제가 한 연구에서, 좀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망라해서 18개 국가들을 놓고 좀 비교를 해 본 건데요.</p> <p>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좀 높아야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좀 점에 수렴하고, 그러니까 최하위 수준이고, 이제 좀 높으면 안 되는 것들, 빈곤율이나 불평등도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이렇게 한국 노인의 삶이 불안정한 이유가 뭔지를,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p> <p>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의 명목상의 대체율 수준이 낮고,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p> <p>그다음에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노인의 소득 중에서 이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한 26.8%p 낮고, 반면에 이제 공적이전이 적으니까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제가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성숙해 가고 있고, 또 이제 기초연금 도입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인데.</p> <p>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갈색과 노란색 부분이 이제 공적연금 부분인데,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그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의 어떤 불충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공적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p> <p>이 비교 대상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쨌든 저 회색의 이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적연금인 저 주황색 그래프를 추가해서 보면 이제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p> <p>그러니까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국가들이 이 연금화된 노후소득만으로도 이 한 사회의 평균, 중위소득에 근접한 삶을 영유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크게 빈곤을 예방하는 기능과, 소득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겁니다.</p> <p>그래서 먼저 이 소득대체 기능은 노인이 아닌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노인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중위소득에 비해서 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그래프의 제일 왼쪽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노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p> <p>그걸 보면 두 그래프 모두 우리나라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노인의 상대적인 위치가 한 중간 정도는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소득에 소득비례연금, 국민연금을 얹었을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노인의 상대적 지위가 이제 쫄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그다음에 이런 소득대체 기능이 부족하면 빈곤 예방, 최소한의 빈곤 예방 기능이라도 이제 좀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까지는 이제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서 그러겠지만, 이 빈곤 완화 기능도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p> <p>맨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각 그래프에서 맨 왼쪽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노인빈곤율입니다.</p> <p>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장소득에 소득비례연금을 얹었을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계산한 거라서, 두 값을 비교하면 이 소득비례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그냥 그래프 기울기만 봐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기능이 좀 완만한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저기 좀 완만하게 나오는 국가는 호주인데, 저기는 기초연금 중심 국가라서 세 번째 소득단계인 총소득단계에서 빈곤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하고 좀 섞이는 부분인데 제가 구분을 지어 봤습니다.</p> <p>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p> <p>일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 측면의 사각지대와 급여 측면의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p> <p>적용 측면에서는 18세-59세 가입연령 인구의 한 36% 정도가 적용제외나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이런 사유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p> <p>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여성의 사각지대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p> <p>연령대별로는 저 청년의 사각지대 문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p> <p>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저 시기를 사실은 뭐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그냥 방치해 둔 측면이 있습니다.</p> <p>근데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 시기에 기여 이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사각지대 문제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사각지대 현황은 사실 특정시점의 횡단면, 그러니까 스냅샷이거든요.</p> <p>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심도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좀 문제가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질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각지대 집단과 사각</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지대가 아니신 분들의 평균가입기간을 좀 비교해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할 경우에 평균가입기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p> <p>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이 사각지대에 속하신 분들의 평균가입기간이 한 7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120개월, 10년을 채워야 최소한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50대에 속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연금이나 무연금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그리고 성별 격차는 당연히 여성들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거, 50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걸 좀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무연금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이 가입기간 동안 최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하더라도, 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개념적으로는.</p> <p>이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국민연금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연령이 지나서도 보험료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임계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와, 그걸 한 5년 정도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 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 건데, 임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도 한 27.5% 정도가 이제 노령연금 확보가 불가능하고, 임계를 한 5년 정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11%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다음에 이런 적용상의 사각지대가 결국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p> <p>이 급여 사각지대는 무연금이나 저연금 문제로 대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률을 얘기하는 건데요.</p> <p>노령연금 수급자가 24년 말 기준으로 한 47%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때 여성들의 수급률이 훨씬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 급여액이 낮아서 이 저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p> <p>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이 한 61.7만 원 정도 됩니다.</p> <p>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다른 지표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지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생계급여 기준선이나 상대적 빈곤선, 최소생활비,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노후 소득부족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현 노인 세대만의 문제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개혁 이후에 이 급여액을 추정해 봐도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상대적 빈곤선의 절반 정도 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의 20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불충분성 문제는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p> <p>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이걸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병폐, 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동안 이제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혀왔고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제도도 도입해 왔습니다.</p> <p>근데 이제 이런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의 보장성 수준이 낮다라는 문제, 포괄 범위가 낮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간단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p> <p>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인정기간을 주요 국가들이 자녀당 2년에서 4년까지도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확대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 시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후 지원 방식인데 이걸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의 어떤 가입률을 높이고 수급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p> <p>근데 이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출산크레딧이 일반 회계 30%, 기금 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체계하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사실은 사후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사전에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그냥 저 상태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국가의 역할은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 부담분을 늘린 상태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p> <p>군복무크레딧도 이번에 이제 12개월로 확대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그냥 무조건적인</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유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 외에도 이제 실업크레딧, 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들도 지금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p> <p>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핵심 사각지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청년들, 여성들, 그리고 노무제공자, 이런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p> <p>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한 거고 하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p> <p>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비중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어떤 이걸 완전히 해소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때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가장 좋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국민연금을 좋게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는 최소한의 인원들에 대해서만 이제 뭐 보험료 지원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이런 방향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향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 <p>말을 좀 빨리 해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p> <p>다음으로 이제 구조개혁 방안이, 우리가 이제 지금 논의가 이제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니까, 이 적정성 측면에서도 이 구조개혁이 필요하거든요?</p> <p>그러니까 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개혁을 위한 적정성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때 공적연금의 적정성 개념을 빈곤 예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확장해서 소득대체, 소득유지 기능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따라서 목표는 달라질 수 있고요.</p> <p>그래서 만약에 방빈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저기 보이는 여러 가지 생계급여든 최소필요노후소득이든 빈곤선이든 여러 가지 지표를 목표로 삼아 볼 수 있고, 소득대체를 목표로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선례를 통해서 좀 이 적정성 목표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앞에서 봤던 그래프인데, 많은 국가들이 어쨌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공적연금, 기여식이든 비기여식이든, 공적연금을 통해서 이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필요하다면 보충연금 등을 추가로 도입해서 이 공적연금을 통한 빈곤 예방이라는 목표를 잡아볼 수도 있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소득대체 측면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 공사연금 제도, 즉 연금화된 노후소득으로 한 사회의 평균에 근접하는 삶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공사연금을 통해서 이 소득대체 기능까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하나의 예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정성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저 금액 자체는 사실은 너무 크게 비중 두지 마시고요.</p> <p>제가 한번 우리 패널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본 거니까,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그 행정데이터는 이제 수급자들의 평균액입니다. 60 몇 만 원, 국민연금.</p> <p>거기다 이제 비수급자들까지 포함했을 때의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패널로 한번 본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노인의 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이 한 38만 원 정도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적정성 목표를 만약에 빈곤선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그 부족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분을 이제 필로 채워 나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공적연금의 이 구조개혁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p> <p>그래서 만약에 저 부족분을 지금처럼 그냥 비보장의 영역으로 남겨 놓는다면, 사실 뒤에 논의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p> <p>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저 그 부족분을 채워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연금으로 채울 건지, 기초연금으로 채울 건지, 보충연금으로 채울 건지, 그리고 그 이상의 급여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래서 이 개혁 수단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제도들마다 각각의 모수를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각 제도들이 어떤 조합을 통해서 구조개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제도에서 어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갖고 오는 정도의 조치가 있다면 그 자체도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p> <p>하여튼 구조개혁은 좀 유연한 개념이고 이런 식의 우리가 다양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정책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p> <p>이때는 구조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각 제도별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이거는 적정성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고려 사항은 다르게 생각될 수는 있어요.</p> <p>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적정성 목표를, 만약에 최소한의 빈곤 예방이라고 전제했을 때의 고려 사항들을 말씀드릴 보겠습니다.</p> <p>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빈곤 예방이라는 적정성 목표를 우리가 잡았다면, 그걸 위해서는 사실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급여 인하는 사실 불가하죠. 왜냐하면 지금 43%짜리 제도하에서도, 40년 만기가 입을 하더라도, 저 빈곤선에 도달을 못 하거든요.</p> <p>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런 적정성 목표를 잡는다면, 국민연금의 인하는 불가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초보장 중심형 체계로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p> <p>그 얘기는 즉 기초연금은 좀 그 자체를 늘리든 아니면, 대상자를 줄이면서 급여액을 늘리든, 대신 이제 국민연금은 현행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런 조치들의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p> <p>한 가지 좀 염두에 뒀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기초보장 중심형 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p> <p>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비기여식 연금이 중심이 된 국가들을 보면, 그게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60% 정도 됩니다.</p> <p>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6.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기초보장 중심형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p> <p>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라는 거고, 복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사회가 추종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고.</p> <p>그다음에 이제 고령화시대에 자기 기여에 기반하는, 이런 기여방식 소득비례연금에 비해서 이런 기초보장 중심형이 지속 가능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그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구조개혁으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중복을 전제로 이 둘 간의 기능을 좀 조정해야 된다,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p> <p>그런데 이때 이 기초연금의 적용 범위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균등비례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는 그 정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p> <p>일단 정당성 측면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제도가 기능이 중복된다라고 했을 때, 기능 중복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투잡 쓰리잡 뛰듯이, 노후소득이 부족하면 이 제도 저 제도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저 기능이 과도해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문제인데 글썽요. 이 건 뭐 생각이 얼마나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정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즉 둘 다 받아도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시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성숙을 전제로 한 중장기 과제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p> <p>만약에 이렇게 선별화나 어떤 보편화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고려해 돼야 될 부분이, 일단 특정 집단이 손해 안 보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하위 소득자에게 역진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그다음에 퇴직연금 부분은, 사실 퇴직연금을 통해서만이 우리나라가 어떤 일정 정도 소득대체 기능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는 생각하는데.</p> <p>최근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최근 논의를 보면, 현 공적연금 상태에서 퇴직연금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p> <p>근데 이제 저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사실 그 공사연금체계나 어떤 균형을, 균형 체계를 이미 수립 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도 일단은 공적연금, 우리보다 훨씬 건실한 공적연금 기반 위에서 사적연금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퇴직연금 논의가 공적연금의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본 원칙은,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p> <p>일단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장기간 성실하게 가입한 평균 소</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득자가, 그러니까 생애를 평균 소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적어도 빈곤선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p> <p>그리고 평균 이하 소득자들 역시 여러 공적연금들, 그리고 국기초까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그런 체계.</p> <p>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 소득대체 목표를 달성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적절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고요.</p> <p>그래서 국민연금 강화, 정상화를 전제로, 이제 기초연금이나 추가적으로 보충연금까지도 고려해서 빈곤 예방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예.</p> <p>그리고 이제 소득대체 기능까지도 장기적으로 보자 이건데. 앞으로 이제 이 정책 조합별로 급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우리가 받아봐서, 그걸 토대로 좀 제도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이 갑자기 왜 나왔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세대 간 형평성 얘기를 하면 부담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앞 세대에 비해서 뒷세대가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즉 부담과 혜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비 차원에서 세대 간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혜택 측면에서도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점검할 지점이 있습니다.</p> <p>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후세대에게 좀 더, 후세대의 어떤 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춰주거나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고령화 시대에 부담을 줄이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럼 결국 혜택 측면에서의 격차를 줄여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재정안정화 방안들은, 우리가 사실 재정안정화라고 하면 받는 돈을 줄이거나 내는 돈을 많이 내는 방식이 그 때문에, 사실은 이 수익비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대 간 형평성에는 역행을 하는 결과죠. 예. 물론 세대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p> <p>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예로, 지난 개혁에서 보험료 올만 인상했다면 사실 이 수익비 측면에서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근데 이제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p> <p>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미래 청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적정성 측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p> <p>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의 격차는, 그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외국도 제도가 성숙해 가면서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 보험료 부담을 낮춰줘서, 이 부담의 격차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p> <p>그다음에 이제 혜택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정상화를 시키든 사각지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일단 혜택의 격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국민연금에서 이제 혜택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공공재정소요나, 아니면 뭐 사적부양부담이나, 아니면 비보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감소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노력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적어놓은 거고요.</p> <p>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고 더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년이나 미래 세대들이 자기 노후도 부담해야 되고, 또 자신의 부모님 세대의 노후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p> <p>그래서 조금 국민연금이 이런 노후소득 부족분을 최대한 메우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p> <p>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이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라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반문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p> <p>먼저 이제 좀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재정안정성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p> <p>저도 이게 답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p> <p>일단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이상일 수는 있지만, 전체 노인이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향으로 또는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이제 뭐 공적연금만으로 다 채울 필요는 없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 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있고 개인의 역할이 있고 할 텐데. 그랬을 때 현재 상태는 총비용이, 만약에 단순 계산해서, 인구 천만 명에게 빈곤선 160만 원에 12개월 치 해서 192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이 저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기초연금이 저 정도의 역할, 그리고 국기초는 한 4조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이제 사적부양 책임으로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비보장, 빈곤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저 상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p> <p>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더 재정안정화 개혁을 해서 국민연금을 줄이게 되면, 일단 저런 사적보장 영역이 늘어날 거고, 비보장 영역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기초연금 수요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최근 많이 나오는 기초연금을 보충연금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저 기초연금 수요는 더 커질 테고, 또 국기초도 이제 지출소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민연금을 키우면서 재정안정화 개혁을 강행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졌을 때를 가정하면, 글썽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공공재정소요가 줄어들고 어떤 사적부양 책임이나 비보장 영역이 줄어드는 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p> <p>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혜택 측면에서의 적정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지출을 우리가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볼 수 있는지,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적정성 목표를 세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라는 게 발생하죠. 전체 노인부양 부담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출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지출 증가는 단순히 후세대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p> <p>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담 측면에서 어떤 기존의 세대 간 형평성 논의가, 기존 논의에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저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이 이번 개혁을 반영한 재정추계 결과인데, 앞 세대는 적 </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게 부담하고 뒷 세대는 많이 낸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였잖아요?</p> <p>근데 이 비용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어떤 제도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 앞 세대는 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기능이 낮은 세대, 그래서 사적부양 부담이 크고 또 노후도 불안정한 세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p> <p>반면에 후세대는 이 지출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세대, 그래서 사적부양 부담이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세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p> <p>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게, 지출추이상 저렇게 늘어날 텐데 파란색 실선으로, 그걸 그만큼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져서 다른 공공재정소요를 줄여주고 사적부양 책임을 줄여주는 거라면, 사실은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한국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p> <p>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다음은 이승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희박사	<p>네 안녕하세요. KDI의 이승희입니다. 먼저 저는 KDI에서 노인빈곤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p> <p>그래서 노인빈곤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이제 가지는 문제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말 단순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p> <p>전반적으로 당연히 청년기나 중장년기에 어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다가, 은퇴 후에, 이 빨간 점선을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p> <p>그래서 결국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부족한 소득분을 채워줘서, 이렇게 빨간색 실선으로 되는 어떤 일정 수준을 창출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이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굉장히 필요한데요.</p> <p>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간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p> <p>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OECD나 월드뱅크의 권고에 따라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래서 0층 기초연금 같은 것도 있고, 1층 가장 중심인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뒤로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p> <p>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주로 보시면 노후소득은 아무래도 현재 0층과 1층,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2층 3층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p> <p>그렇다면 결국은 이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입니다.</p> <p>3페이지 보시면은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4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이 한 10% 중반대입니다.</p> <p>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굉장히 높습니다.</p> <p>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빈곤율을 연관지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결국은 뭔가 이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노인빈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뒤 페이지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지를 소개를 해 놓은 거고요.</p> <p>그다음에 이제 두 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p> <p>첫 번째는 노인빈곤율 수치 추이이고요.</p> <p>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OECD 기준에서 청장년층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간에 빈곤율 비교하는 그림입니다.</p> <p>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단 초록색은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고, 빨간색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입니다.</p> <p>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는, 결국은 어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세금을 빼고, 공적인 영역에 포함된 것이 처분가능소득기준 노인빈곤율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인빈곤율입니다.</p> <p>이 수치를 보시면은 2016년 43.5%에서 최근 수치가 2024년 기준 35.9%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래서 이 노인빈곤율이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은, 이 노인빈곤율은 일단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먼저 구하고요.</p> <p>이 중위소득의 보통 50%를 빈곤선으로 정하는데, 결국은 이 노인빈곤율이란 말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대비 좀 빈곤한 고령층의 비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근데 사실 이 노인빈곤율이 35.9%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청장년층 빈곤율과 비교했을 때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p> <p>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가로축은 청장년층 빈곤율이고 이제 세로축이 노인빈곤율입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점선이 45도선, 청장년층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같은 선이고요. 검정색 실선이 이게 전 세계 OECD의 추이입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실선이 아무래도 점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세상, 노인빈곤율이 청장년층 빈곤율보다 좀 높습니다. 이건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보시면 점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p> <p>그러니까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 중에 청장년층 빈곤율보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일반적으로 노인빈곤율이 청장년층 빈곤율보다 소폭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하지만 예외인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예외인 국가에 속하게 되죠.</p> <p>청장년층 빈곤율은 10% 초반대인데, 노인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장년층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과 큰 차이가 나타날까가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p> <p>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고령층 소득 구성, 앞에서 유희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인빈곤 같은 경우가 결국은 고령층의 소득 구성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p> <p>그래서 보시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인데요. 이게 OECD 평균이 한 60%니까 거의 절반 이하인 수준입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대신 자본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높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재 노인빈곤이 결국은 현재 공적이전소득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p> <p>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 같은 경우에서 좀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 소득만으로는 현재 고령층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기에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윤석명 박사님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봤었을 때는 소득 빈곤 노인 중에 한 절반 가량은, 자산으로 봤을 때는 빈곤하지 않다. 이런 결과들도 있고요.</p> <p>사실 요즘에 이제 최근 이쪽 연구에서는 소비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소비로 봤을 때는 고령층이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일단은 자산과 소비를 함께 구현해 봤습니다.</p> <p>시간 관계상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9페이지 보시면 자산의 소득화가 있는데요.</p> <p>우리나라 고령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일단은 자산의 소득화해서 빈곤율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소비도 이제 최근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비를 이용해서도 빈곤율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p> <p>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산과 소비를 이용했을 때 계산 빈곤율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소득기준 빈곤율이고요. 일단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자산을 활용했을 때 빈곤율, 노란색이 소비기준 빈곤율입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자산을 고려하거나 결국 소비를 고려하거나 모두 빈곤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p> <p>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고령층이 소득이 빈곤하더라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는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p> <p>하지만 보시면 빈곤율 같은 경우가 2021년 기준으로 여전히 한 30% 내외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p> <p>그래서 이 30%라는 수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아직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산이나 소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빈곤이 꽤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p> <p>뒤 페이지에는 이제 그렇다면 정말 정말 취약한 계층인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거나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계층에 대한 비율인데요.</p> <p>보시면은 자산을 봤었을 때,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한 고령층이 2021년 27.7%였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소비와 소득이 모두 빈곤한 고령층 같은 경우도 한 21%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노인빈곤 현황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소득 외에 자산이나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해도 노인빈곤률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소득과 자산이나 소비 모두 적은 고령층의 취약계층 비율도 여전히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이것을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었을 때도, 이렇게 되면 노인빈곤율 간에 이제 다른 국가들 간의 차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p> <p>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이에 대해 답하기 전에, 그렇다면 현재 고령층에서 누가 심각하게 정말 빈곤한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p>만약에 현재 고령층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빈곤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인빈곤을 쉽게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하지만 만약에 고령층에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빈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면은 이 집단에 맞는 어떤 제도를 포커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p> <p>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노인빈곤을 분석을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노인 고령층 내 세대 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입니다.</p> <p>그래서 일단 15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제 노인빈곤율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최근 관찰됩니다.</p> <p>첫 번째는 노인빈곤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맨 처음 보여드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이고요.</p> <p>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령층과 연소고령층 간의 빈곤율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p> <p>앞에서 유희원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 빈곤율과 65</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세-74세 빈곤율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p> <p>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 그냥 연령대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까에 대해서 저는 이 노인들을 이제 세대별로 한번 비교를 해봐 있습니다.</p> <p>그래서 고령층 내에서, 이제 출생세대에 따라서, 30년대 후반 출 생, 40년대 전반, 후반, 50년대 전반, 후반, 이렇게 다섯 세대를 나 뉘어서 한번 이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를 평가해 보았습니 다.</p> <p>뒤 페이지 보시면은 각 출생 세대별로 이제 빈곤율 추이를 그린 그림입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30년대 후반, 주황색이 40년대 전반, 초록색 후반, 파란색 50년대 전반, 보라색 50년대 후반, 이렇게 나 타났는데요.</p> <p>보시면은 이 노인빈곤율 그래프 자체가 전반적으로 세대에 따라 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p> <p>그리고 1950년 이전 출생 세대 같은 경우는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40% 이상으로 높고, 그 이후 세대에서는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낮 습니다.</p> <p>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령효과와 세대효과입니다.</p> <p>연령효과는 뭐냐면은 각 세대 내에서 다음 해로 이동할수록 노인 빈곤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연령효과로 볼 수가 있거 든요.</p> <p>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세대효과가 있는데요. 세대효과 같은 경우 는 이런 연령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이 빈곤율 간의 어떤 갭이 존 재하는 세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세대효과를 드러낸 그림인데요.</p> <p>이게 지금 보시면 가로축을 이제 이 동일 연령대로 조정을 했었 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보라색이 62세에서 66세 됐을 때랑 파란색이 62세~66세로 됐을 때 이 차이가 세대효과입니다. 이 세대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결 국은, 1950년 이전 세대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는 결 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서 도, 이 세대 간 빈곤율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예를 들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봤었을 때는, 이 고령층 내에서 50년대생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시는게 50년대생 비중이고요.</p> <p>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해봤을 때, 제가 분석한 2016년에서 21년간 노인빈곤율이 한 6%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 감소분의 대부분이 인구 비중 변화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결국은 덜 빈곤한 50년대생이 고령층에 포함이 되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빈곤율이 감소한 것이 가장 도미넌트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더 많은 에비던스가 있는데요.</p> <p>여기서 뒤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은 취약계층이나, 소득과 소비 모두 적은 취약계층 비율에서도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은 고령층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굉장히 높고요.</p> <p>반면에 이제 5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하로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납니다.</p> <p>최근 세대로 올수록 아무래도 빈곤수준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p> <p>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행정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세대별로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소득인정액이 0원인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p> <p>소득인정액이 0원 되려면 일단은 월소득이 기초연금이나 저런 국민연금을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이하이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억 원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인데요.</p> <p>보시면은 이제 30년대 후반생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 0원인 비율이 2023년 기준 한 30% 가까이 됩니다.</p> <p>그러니까 이 30년대 후반 출생에서 30% 정도는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고 자산도 1억 원 이하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p> <p>5년 뒤 세대 40년대 전반인 경우는 이 비율이 거의 반 정도, 15.7%로 줄어듭니다.</p> <p>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40년대 후반 출생이나 50년대 전후반 출생만 돼도 이 비율이 확 줄어들어서 10% 이하,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정데이터를 봤었을 때도, 이 세대 간 빈곤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요.</p> <p>실제로 이게 반영되는 것이,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추이인데요.</p> <p>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2015년 보시면 이 빨간색 붉은 바가 이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점선 같은 바가 기준중위소득입니다.</p> <p>그래서 보시면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 기준중위소득에서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낮았는데, 점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개선되면서 선정기준액이 굉장히 중위소득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는 이제 기준중위소득의 93% 정도가 선정기준액이 됐고요.</p> <p>앞으로 추계상으로는 2027년만 돼도, 이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기준중위소득보다 더 높은 정도의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는 고령층 내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빈곤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렇다면 이렇게 세대 간 차이가 왜 빠르게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p> <p>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가 굉장히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p> <p>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입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체 어떤 사람들의 경제 수준 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 고령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인데요.</p> <p>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뒷 세대일 수록 경제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전 세대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p> <p>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예를 들어, 1935년생의 1인당 GDP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6,700달러 이하, 600달러, 5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p> <p>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옛날에 계셨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전후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전쟁 전후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이때는 빈곤율을 계산할 때</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는 당연히 절대적 빈곤 기준으로, 하루에 소득이 1달러, 2달러 이상 발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빈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시대에 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세계 10대 강국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게 1인당 GDP에서도, 결국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 경험의 차이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 수준이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관련된 사회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고령층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출생 세대별로 최종 학력 수준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p> <p>보시면은 1930년대 후반생만 해도 30%는 초등학교도 못 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20년 뒤인 50년대 전반생만 해도 이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의 비율은 4%대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학교 이상 비율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세대별로 이 교육 수준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도 경제 상황이나 건강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국민연금 성숙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더 이전에 태어난 분들일수록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공식데이터를 이용해 건 아니고, 통계 연구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산을 한 것인데요. 세대별 국민연금 수급률을 보시면은 3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한 26%대인데 50년대 후반에 61.1%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빈곤이 심각한 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 전반생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이런 수급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월평균 수급액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평균 30만 원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근데 반면에 50년대 후반생, 60년대, 이분들은 60만 원, 7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라든가 수급액이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1960년대, 70년대생들입니다.</p> <p>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전 세대인 30년대생, 40년대생과 비교했을 때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기 때문에 결국 노인빈곤율은 계속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p> <p>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p> <p>그럼 일단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거시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노인빈곤이 어떻게 될까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p> <p>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크게 이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 하나와, 고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두 가지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2024년 한 2% 정도 성장률 예상에서 70년에 0.6%, 0%대로 이제 하락할 것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p> <p>노년부양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노년부양비가 24.7 수준인데 70년에는 103.3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p> <p>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인과 노인빈곤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요.</p> <p>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한다는 거죠.</p> <p>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천천히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빈곤선은 천천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p> <p>그리고 결국은 빈곤선이 천천히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이 사회 제도 같은 경우 역시도 이게 급격히 변화할 수는 없고 완만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p> <p>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고령층 내 어떤 경제 수준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고령층과 청장년층 간의 경제 수준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p> <p>그리고 두 번째 고령화가 되면은 고령 인구가 많아집니다.</p> <p>그럼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득인데,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이 중위소득은 고령층 소득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p> <p>그렇게 되면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하게 되면은 노인빈곤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p> <p>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우리가 모든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없다, 고령층의 모든 소득이 0이라고 하더라도 2070년에 전체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되게 되면은 노인빈곤율은 0%가 될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결국은 노인빈곤율을 바탕으로 우리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향 같은 거를 좀 고민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자면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 노인빈곤율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심각한 빈곤에 주로 기인합니다.</p> <p>하지만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연금의 혜택을 지금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세대입니다.</p> <p>따라서 국민연금이 보장 수위를 높이더라도 현재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p> <p>왜냐하면 현재 노인빈곤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 그러니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p> <p>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운영해서 빈곤한 고령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노인빈곤율이나 우리나라 노인 통계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금액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 혜택을 굉장히 적게 받은 세대들이 굉장히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p> <p>그럼 결국은 평균의 함정처럼 이런 통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 세대를 반영한 것이지 미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앞으로 고령층에 포함될 세대가 60년, 70년대생인데, 이분들과 현재 초고령층인 30년, 40년대 생을 비교해 보시면은 결국은 노인빈곤율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도의 변화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위원장	두 분의 발제자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승희 박사님이 상당히 시간을 절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논의를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록을 녹취하는 데 있어서 성함을, 의견을 제시하시기 전에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면 녹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희원 박사님이나 우리 이승희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윤석명 박사님, 정세은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석명 박사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세은 교수님.
정세은위원	잠깐 하기 전에 저희가 몇 시까지 할지? 약간 좀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그걸 조금 먼저, 발제시간, 발표시간, 질문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 좀.
박명호위원장	5시까지 끝내는 걸 저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식 박사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윤석명위원	제 발언 해도 될까요?
박명호위원장	네. 해주십시오.
윤석명위원	윤석명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어서 발언할 때마다, 발언권 없는 분들이 끊임없이 제 발언에 개입을 해서 제가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자문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발언을 방해하는 듯한 액션이 취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건 제 질문 시간에 포함시켜주지 마세요. 제가 두 차례 회의에서 참고 참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박명호위원장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이나 논의할 사항들은 발제와 관련된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할 테니까, 지금은 발제와 관련을 해서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명위원	제가 몇 분 발언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제 발언 내용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호위원장	네. 2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윤석명위원	2분 이내. 저 윤석명입니다. 먼저 유희원 박사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유희원 박사님 지난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때 저랑 같이 진술인으로 참여를 하셨었죠? 그때 저한테 강남 갑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께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발언자	의결본(최종)
	<p>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갖고 50대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정할 걸 갖고, 그걸 보여주신 뒤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자료가 뭐냐 하면, 50대의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득 수준별로, 100만 원 미만 가입자들은 12년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2.5년. 반면에 500만 원 이상 가입자들은 23.3년이 됩니다. 50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정년 5년 연장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가입기간이 한 35년 이상을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p> <p>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유희원 박사님이 여러 논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 상당수는 평균적인 어프로치(Approach)라는 거죠.</p> <p>우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린다, 아까 이승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950년대생 대다수 빈곤한 노인들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것 대비 굉장히 많이 받는, 이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혜택은 고소득층한테 집중돼요. 고소득층이 오래 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해서 오래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희원 박사님, 저 발제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p> <p>다음으로 이승희 박사님 발표, 너무 너무 저는 오랜만에 좋은 발표를 들었고, 제 연구 내용도 이제 인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저는 알카이어-포스터(Alkire-Foster) 멀티-디멘전 어프로치(Multi-dimension approach)를 사용해서 2017년에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p> <p>노인빈곤율이 19.5%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인 집단 내에서 자산을 고려할지라도, 자산이 거의 없는 노인 집단들은 소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OECD 기준 빈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집단이라는 거죠.</p> <p>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양극화된 집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재산까지 고려할 경우는, 청년층보다 압도적으로 부유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p> <p>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나라 노인빈곤율하고 청년빈곤율 비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2012년인가 뉴질랜드를 갔을 때, 뉴질랜드는 기초연금이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빈곤율은 굉장히 낮아요. 대신 상대적으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아동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모든 건 트레이드 오프(Trade-off)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좀 코멘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p>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p>
정세은위원	<p>네. 정세은입니다. 여기 이승희 박사님의 발표를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저희가 모든 논의는 또 팩트에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부분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산과 소비를 감안했을 때 노후 세대가 그렇게 빈곤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소득화했을 때, 근데 아시다시피 자산 격차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 소득 쪽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굳이 이사를 가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p> <p>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자산은 있지만, 다들 그거를 진짜 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노후가 빈곤하지 않으니까 공적연금을 거기에 맞춰서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진짜 노후, 우리와 다른 선진국 전체적으로 자산을 포함해서 공적연금을 상계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세계에 없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p> <p>그다음에 소비를 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인빈곤이 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득이 작는데 소비가 많은 거는 결국에는 사적으로 자녀들이 부양한다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p> <p>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아까 유희원 박사님께서 공적보장이 좀 많아져야지 사적보장이 적어도 개인의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승희 박사님께서 공적연금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자산과 소비를 고려한 빈곤율 개념을 얘기하신 거는, 앞으로 공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갖고 가야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 그냥 참고 삼아 보자,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p> <p>그다음에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아까 세대별로 노인들 60대, 70대 이렇게 빈곤율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이제 근로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 중에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거꾸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연금이 발전한다면 어느 정도 은퇴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공적연금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너네들이 일을 하니까 빈곤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맞는 개념인가가 있겠고.</p> <p>그다음에 지금 60대가 낮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60대가 아니고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지금 60대가 빈곤율이 낮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은 계속 낮은 빈곤율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빈곤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유희원 박사님께서서는 현재의 공적연금 이 제도가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도 빈곤율이 그다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장이 약간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과 소비를 넣어서 빈곤율을 하는게, 이게 공적연금과 맞는 얘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요.</p> <p>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60대가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다 다시 나이가 들고, 또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김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신영위원	<p>예. 김신영입니다. 이승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이런 연구를 한 지가 꽤 오래됐구나 그런 굉장히 큰 쾌감이 좀 있었고요. 무릇 연구자라면 이런 결과들을 내줘야 된다는,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고.</p> <p>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교하고 품을 많이 들인 이런 보고서도 사실 폐지 줍는 노인 사진 한 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진 하나면 끝납니다. 사진 하나면. 그리고 뭐 무슨 하여튼 예, 시끄러운 분들, 해서 이제 기사 뽑고, 노인빈곤률 OECD 최고, 이게 북한 자료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으면, 이렇게 분석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p> <p>그래서 저는 사실 박사님에게 좀 여쭙보고 싶은게, 노인빈곤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 잘 봐줘야 과대 추정이고요. 추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사회 지표로서 미적립부채도 그렇지</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만 사실 노인빈곤율도 사회 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표라는 게 필요하죠.</p> <p>근데 그 지표가 타당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이 될 때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항상 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보고 싶은 게 그 발표하신 말씀들을 국민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p> <p>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p>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발제하신 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원종현위원	<p>예. 원종현입니다. 발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꼼꼼하고, 그 꼼꼼하신 글인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p> <p>지금 이승희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페이지 16페이지나 페이지 20 페이지를 지금 요약해서 이 그림들을 봤을 때, 현재 30년대 후반, 40년대 전반의 분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차피 근본적으로 좀 빈곤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있는 분들은 이제 빈곤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한 지금 20년쯤 지나면 이 앞에 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이게 가장 지금 인상적으로 잘 들리는데요.</p> <p>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정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크게 공감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낮은 이유, 예를 들어서 세대 간 노인빈곤율 부분에서 소득인정액이 지금 0인 비율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이분들의 자산이 소득화되면서 낮은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60대 70대의 근로로 인해서 사실 소득인정액이 지금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70대 이후에 상당히 근로 능력이 상당히 경감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 빈곤율이 그러면 계속 낮은 상태로 7, 80대까지가 유지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지금의 뷰로만 봤을 때, 물론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사실 20년 후에 돼도 크게 변화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p> <p>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세대가 변해서 20년 후에 가면, 아마 지금 60대에서 되게 낮은 분들이, 위에 아마 근로 능력이 없어지는 분</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들로 지금 빠지시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아마 60, 70 대도 또 일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30대(30년대생), 40대(40년대생)는 국민연금을 조차 없는 절대적으로 빈곤하셨던 분들인데, 그것과 지금의 50년대 전반, 50년대 후반 분들은 다르지 않겠냐? 하는데.</p> <p>문제는 지금 아까 유희원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히 넓은 폭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의 20년, 30년, 40년대 분들하고 큰 차이를 못가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p> <p>그래서 이런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계속 줄이지 않는 한, 이 빈곤의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인 거고</p> <p>그다음에 이제 맨 첫 페이지, 첫 그림이 저는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첫 페이지의 그림 보면 이제 소득 생애주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p> <p>그런데 이 소득 생애주기의 구분에서 저는 일종의 소비와는 다른 지출 주기도 좀 같이 봐준다면은, 사실은 지출이라는 부분에서 중장년기가, 제가 지금 딱 요 중장년기에 보니까는, 지금 애들 대학 등록금하고, 곧 결혼한다는데 지금 저도 다시 빚내서 지금 해줘야 되는 부채 부분이 사실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부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은퇴 노년기의 제일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저겁니다. 지금 애들이 손만 안 벌리면은 좀 먹고 살 것 같은데, 이게 부채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p> <p>그러니까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순자산이라기보다는, 이게 상당한 부분에서의 부채에서의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p> <p>그러니까 저희가 소비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갭을,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지출 대비 소득해서 순소득 부분으로 좀 보면 되게 재미있는 연구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p>예.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제재를 안 했는데 위원분들이 다 2분을 다 넘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5시 안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p> <p>토론해 주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핵심만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답변해 주실 분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그러면 네 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승희 박사님하고, 유희원 박사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먼저 하시죠.</p>

발언자	의결본(최종)
유 희 원 위 원	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일단 윤석명 박사님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50대의 평균가입기간이 높고, 이 사람들이 기준소득월액이 높다?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윤 석 명 위 원	50대 이상 연령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 수준별로 현재 가입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이 12.5년, 500만 원 이상 가입자들은 23.3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50대 연령층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년연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로 만약에 연장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35년이 쉽게 넘어갈 거는 거죠.
유 희 원 위 원	지금도 이제 장기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있고.
윤 석 명 위 원	그래요.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제 질문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 희 원 위 원	아니 아니, 그 역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윤 석 명 위 원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분들이 오래 가입해서, 낸 거보다 많이 받는 건 오래 가입해서, 후세대 부담 많이 줘 가면서 받아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또 더 오래 살아 연금받는 기간이 훨씬 길다 보니 저소득층보다 연금 받는 게, 극단적으로 2배를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역진적인 제도를 왜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유 희 원 위 원	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꾸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역진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문제고 사각지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실은 그 부분이 잡히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민연금은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재분배 제도만은 아니죠. 이제 비례 요소가 들어간 그 소득비례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급여액의 절대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은, 이 연금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의 소득비례연금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역진성 문제로 몰고 가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분명히 재분배 장치를 갖고 있는 제도...
윤 석 명 위 원	한 번만 더 말씀을.
박명호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유 희 원 위 원	역진성은 그렇게만 좀 말씀을,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다인가요?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사실 이제 빈곤율을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빈곤율을 봤던 거는 이제 뭐 말씀 주셨지만,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일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60 몇만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려면 다른 지표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p> <p>그래서 현시점에 빈곤선하고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모자란 수준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부족분을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만약에 잡는다면, 우리가 적정성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다면, 뭔가 수단을 찾자라는 차원에서 이 빈곤율 말씀을 좀 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이승희 박사님.
이승희 박사	<p>먼저 윤석명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자산을 포함해서 빈곤율은 19.5%입니다.</p> <p>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보고서에서는 지금 여기 제가 다 설명은 안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는데요.</p> <p>첫 번째는 자산의 포괄 소득화 방법이라고 자산을 소모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그냥 고령층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을 하나 사용했고, 연금화랑 자산 소모를 다 한다는 가정하에서 두 개를 써서, 사실 전반적으로 자산과 소모에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수치가 전반적인 약간 사회적인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p> <p>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19쪽 제 거의 범위 안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p> <p>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OECD 청장년층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간의 그림 가지고 보셨을 때, 이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 중에 청장년층 빈곤율이 훨씬 높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프랑斯拉든가 브라질이라든가.</p> <p>근데 이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공론화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게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건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청장년층의 빈곤율이 높이면서까지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p> <p>결국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청장년층이 소득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다 이용을 해서 노인층의 빈곤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추세선 근방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p> <p>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자산 소득...</p>
윤석명 위원	아 박사님이 제가 했던 질문 하나의 답변을 빠뜨리는데, 뭐냐하면

발언자	의결본(최종)
	<p>제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산까지 고려해서 보니까 모든 집단 중에서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 모든 그룹 중에서 가장 아주 빈곤하고 처참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시사점 같은 걸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이 승 희 박사	<p>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저소득 저자산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습니다.</p> <p>근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한 10% 정도는, 자산을 봤었을 때는 이 빈곤선을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자산을 꼭 강제로 소모하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p> <p>그렇다면 저는 취약계층을 봤을 때는 결국은 소득과 재산 모두 적은 계층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분석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p> <p>정세은 교수님 질문도 비슷한 것인데, 자산소득화를 제가 왜 한 것이냐면, 저는 고령층에서 정말 누가 어려운지를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적인 어떤 디멘션은, 아까 윤석명 박사도 말씀하셨던 알키레-포스터의 같은 경우도 파버티 같은 경우에는 멀티디멘셔널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소득, 자산, 소비 다 봐야지 전반적으로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자신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취약계층이 분석해 보자 했었고요.</p> <p>그래서 공적연금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자산을 고려하자라는 것은, 이미 사실 기초연금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p> <p>그리고 소득이 소비보다 높은 계층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채널도 있지만 사실 디세이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소모해서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자산으로부터 오는 암묵적 소득이 포함된, 그렇게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가 소득보다 높은 고령층이 생길 수가 있고요.</p> <p>그리고 연령효과, 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세대 간 차이에서 결국 캡처할 수 있는 게 세대효과랑 연령효과인데, 보시면은 시간이 연도가 흐름에 따라서 이 세대별 빈곤율이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결국은 연령효과죠. 아무래도 연령이 하나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나오게 돼서 근</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로수익이 줄어들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세대효과 갭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효과가 좀 더 동일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p> <p>김신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이거를 예전에 KDI에서 저희가 포커스라는 걸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좋은 채널이 있을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그다음에 원종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소득인정액을 제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 1억 이하인데 교집합입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30년대 후반, 40년대 전반 세대의 한 30%의 빈곤은 이분들은 소득도 정말 없으면서 자산도 1억 이하, 근데 지금 보시면은 50년대 전반, 후반생은 10% 이하인데 이분들은 결국 뭐냐면은, 소득이 없더라도 일단 자산이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결국 소득이나 자산 중에 하나는 어떤 기준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세대 간 차이가 저는 캡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p> <p>그리고 이 지출 주기, 결국은 이게 지출 주기가 이 경제학에는 우리가 컨셉선 스무딩을 한다고 해서 생애주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걸 굉장히 또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p>예. 지금 저한테 질문 요청하신 분이 류재린 위원님, 박나리 위원님, 김원섭 위원님, 김학주 위원님 네 분입니다.</p> <p>네 분 먼저 하고 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류재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p>
류재린위원	<p>네. 류재린입니다. 먼저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p> <p>제가 이제 발표한 이 코멘트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저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팩트는 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p> <p>예를 들면 우리가 미적립부채 얘기했지만 미적립부채 심각하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노인빈곤도 심각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p> <p>그러니까 저는 이승희 박사님 발표를 어떻게 들었냐면, 포괄 소득화를 하든 연금화를 하든 어떻게든 우리나라 노인층이 굉장히 빈</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곤하다. 다만 이제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으니 현재 후기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p> <p>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빈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물론 아까 김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 줍는 노인이 그러면 노인을 대표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빈곤한 것,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p> <p>그 두 분께 그 조금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p> <p>먼저 유희원 박사님께는 소득대체율과 보편적 포괄성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는데, 아까 유희원 박사님께서서는 그 재분배 기능을 좀 뭐 완화하거나 없애면, 이 상충 관계가 있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서 그건 좀 증장기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p> <p>저는 개인적으로 재분배 기능이 있는 한, 저소득층을 포괄할수록 A값이 하락하는 문제? 그런 그 보편적 포괄성과의 적정성의 상충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박사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포괄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p> <p>그리고 이승희 박사님 발표에서는 지금 혹시 발표 서두에는 이제 고령층의 소득을 좀 분해해서 보셨잖아요?</p> <p>노동소득과 자산과 이렇게 공적이전을 분해해서 보셨는데, 혹시 지금 현세대 고령층의 노동소득 비중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보셨는지?</p> <p>아까 앞서서 많은분들이 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의 초기 노인은 사실 노동소득으로 다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실제로 가금복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코호트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빈곤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p> <p>저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저는 유희원 박사님 뭐 위원님 의견과 이승희 박사님 계속 주장하신 게 다 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정도는 이제 빈곤율이 떨어지는 걸로 전망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승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저희 질문입니다.</p> <p>이상입니다.</p>
김신영 위원	아니 저희끼리 내에서 막 이렇게 이름 거명하고 그래도 되는 겁

발언자	의결본(최종)
	니까?
박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김신영위원	아니 제가 폐지 줌은 노인이 한국 노인들은 평균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소위 얘기하는 담론 규정의 과정에서 그런 소재들이 악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걸.
박명호위원장	김신영 위원님, 일단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 박나리 위원님 질문.
박나리위원	<p>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빈곤을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p> <p>이승희 박사님 발표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장 노인빈곤율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제 인구구조가 변화하니까 이제 조심히 사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한번 확인을 받고 싶고요.</p> <p>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이니까, 그럼 만약에 노인빈곤율을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보장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그렇다면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p> <p>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현재 지금 노인빈곤율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금제도도 크레딧이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1950년대생의 이제 수급률 61%, 수급액, 평균수급액 60만 원,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관련한 제도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p> <p>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다음은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김원섭입니다.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승희 박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박명호위원장	마이크에 좀 가까이.
김원섭위원	<p>상당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세대 간의 경제 성장의 격차에 따라서 세대 간의 빈부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면을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 합니다.</p> <p>근데 두 번째 이제 빈곤 문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p> <p>제가 포괄 빈곤까지는 이제 빈곤율까지는 제가 이해가 해볼 필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있겠다 싶은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소비나 연금화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 같은 경우는 소비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연금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p> <p>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능력을 다 소진한 이후에 국가에 도움을 청해라. 그거는 전형적인 어떤 사회부조를 받을 때 그런 논리인데, 우리가 연금을 이야기할 때 그 논리를 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p> <p>제가 질문을 또, 소비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비교라든지, 아니면 연금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해서, 아마 이게 아직 스테이블한 지표가 아니지 않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p> <p>두 번째는 전체 발표의 논리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노인빈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럼 국가나 아니면 사회가 그에 대해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p> <p>유희원 박사님께서서는 이제 포괄적인 내용하에서 간략하게 잘 들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p> <p>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미래 세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20세 이상 사람들 이야기잖아요?</p> <p>그러면 지금 현재, 재수 없이 일찍, 우리나라에서 일찍 태어나서 지금 60% 이상이 빈곤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이 15년 이상을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될 시민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랑 같이 살 조치가 필요하잖아요?</p> <p>그러면 이제 아까 내용에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할 거고, 중장기가 어떤 조건이 충족 되어질 때인지, 그럼 국민연금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현 노인과 미래의 노인들 간의 어떤 조화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논리적으로 왜냐면 앞에 박사가 계속 국민연금의 취약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약성은 당연히 한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러면 이제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세대에 대해서 현 노인 세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있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다음은 김학주 위원님.
김학주위원	<p>네. 김학주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해 주신 이승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세대 간 빈곤율 비교를 통해서 그 노인 빈곤에서 평균의 오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p> <p>그리고 이제 유희원 위원님 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p> <p>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그 세대 간 형평성 역행 사례 3.자동조정장치, 여기서 맨 끝에 결론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청년 세대를 혜택 측면에서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적혀있습니다.</p> <p>첫 번째 질문입니다.</p> <p>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인구 구조적 사실이고, 자동조정장치는 그러한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즉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세대 간 형평성을 역행하는 사례가 되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 지금 현재 문장 자체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p> <p>두 번째로, 혜택이라는 표현을 지금 보고서 전반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혜택 감소라는 표현은, 절대적 기준으로 쓰셨지만 사실 이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인 기준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p> <p>즉 1,8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고도 급여는 유지되고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그반사실적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p> <p>그런 기준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하면 청년 세대가 혜택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진술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작성하신 후에 논리검토를 해보셨는지, 저는 지금 아무리 읽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p>

발언자	의결본(최종)
	드립니다.
유 회원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으셨으면.
박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승희 박사님, 유 박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희 박사	<p>먼저 류재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 소득 구성을 크게 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 노인, 아니, 그래서 연속으로 인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노동소득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거의 노인들과 좀 다른 점은, 최근에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 회의를 가게 됐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게, 최근 세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다. 근데 이런 것들과 결국 또 다른 방향이 있는데, 건강 수준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철희 교수님 페이지에서는 최근 세대일수록 건강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거든요.</p> <p>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령층이 되어서도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어떤 의지가 있지 않을까, 과거 세대 비교해서.</p> <p>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조금 더 과거 세대에 비해서 고령층의 증가도 높고,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빈곤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p> <p>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0년대, 70년대생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더라도 조금 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마 유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p> <p>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채널이 맞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결국 저는 조금 더 노인빈곤을 감소 요인으로 조금 한 적어도 20~30년 내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p> <p>그리고 박나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빈곤율은 중요한 지표입니다.</p> <p>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거의 사실 빈곤 연구하시는 분들은 빈곤율이라는 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경계선 넘어버리면 그냥 빈곤하지 않게 되거든요.</p> <p>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또 국제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지표이고요.</p> <p>저는 노인빈곤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평균의 함정</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근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같이 지표를 제시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p> <p>보장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빈곤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것들은 어떤 연구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적인 지표가 빈곤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p> <p>그리고 국민연금 수급률 같은 경우가 지금 50년대 후반, 60% 후반? 이렇게 되는데, 저는 60년대, 70년대생까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것도 평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p> <p>그리고 김원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화나 소비 같은 지수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지표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것도 결국은 소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를 빈곤에 대한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고령층의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고요.</p> <p>특히 연금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산을 모두 다 소모한다면 굉장히 가난해지지 않습니까?</p> <p>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게 자산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요 이상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간다는 수치에서 하한값으로 이거를 같이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p> <p>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냐면은, 저는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결국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p> <p>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유 위원님.
유희원위원	먼저 그 류재린 박사님 질문 주신 거 포괄성, 국민연금이 이제 A 값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포괄성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정성이 떨어질 수

발언자	의결본(최종)
	<p>있어서.</p> <p>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제 기초연금을 제대로 강화하면서 이제 떼어내면, 재분배 기능을 떼어내고 국민연금을 비례 요소로 가면은 그거 좋죠.</p> <p>근데 이제 지금 논의되는 이런 분리 방안들이 보면은, 이제 기초연금을 선별하면서 1, 20만 원을 올리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을 이제 보충연금으로 전환하는데 그 기준소득을 한 70, 80 정도로 낮게 잡아요.</p> <p>그럼 그런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그 중간에 피해 보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라는 거, 좀 설명으로 같음하구요.</p> <p>그다음에 이제 김원섭 교수님,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후세대를 위한, 뒤에 거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오히려 혜택을 강화해야 이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강화는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방안이구요. 미래 세대의 빈곤 예방 장치로 작동하는 거고. 현재도 이제 노인빈곤 문제는 남아 있죠. 그거는 이제 부족하더라도 국기초든 기초연금이든 그게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p> <p>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런 기초연금이나 어떤 공공부조 중심형 체계가, 장기적으로도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한국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p> <p>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초연금의 역할을 지금보다 뭐 키우든 이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기여에 기반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을 때에 이런 기초연금 수요도 줄고, 빈곤을 조금 막아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p> <p>마지막으로 김학주 위원님 관련해서는 글썬요. 저는 이런 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발제자료를 만들고 읽어봤냐? 이런식의 좀 비하식의 표현은 우리가 서로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동조정장치가 뭔지는 보고 질문을 하십니까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얘기는 서로 좀 자증 했으면 좋겠고.</p> <p>일단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동조정장치가</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급여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도 사실은 자동조정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는, 이제 그런 기대수명 변화나 아니면 가입자 증가 폭에 따라서 이제 급여액을 낮추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발동 시점이 30년대 후반, 아니면 40년대, 5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급여가 이제 삭감되는 거를 겪게 되는 세대들은 후세대로 가기 때문에, 이 혜택 측면에서의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p> <p>그리고 제가 이제 혜택을, 혜택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익비 차원에서 이제 세대 간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세대 간 형평성 논의가 주로 이제 내는 돈과 받는 돈, 그러니까 수익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분리를 해본 거예요.</p> <p>내는 돈 측면에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제도가 성숙해 가면서 보험료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p> <p>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혜택을 낮추는 조치까지 병행했을 때, 그 수익비 차원에서 말하는 세대 간 형평성은 당연히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걸 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말씀드리려는 거고, 제가 뭐 어떤 그 뭐 그걸 색깔을 갖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수익비라는 게 결국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문제라면, 내는 돈도 늘어나고 혜택도 줄어들면 후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혜택 개념을 썼다라는 거고.</p> <p>그다음에 이게 이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결국은 수익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부담 증가는 이미 13%까지 올렸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OECD 평균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p> <p>고령화 추이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정 기여, 적정급여 체계를 지향할 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세대 간의 어떤 불공평 문제, 수익비 차원에서 불공평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대한 안정적인 보장 수준을 지켜주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나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p> <p>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수익비 차원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p>
김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명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를 해 주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발제

발언자	의결본(최종)
	<p>해 주려고 노력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발언으로 서로 격려도 해 주는 그런 발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p> <p>지금 정해식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다음번, 그래서 우리 송헌재 박사님, 그리고 박철언 박사님. 위원장님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정 해 식 위 원	<p>예. 정해식입니다.</p> <p>오늘 이승희 박사님께, 아까 이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교육 수준도 늘고 건강 수명도 늘고 해서, 또 이제 전기 노인들이 경제적 상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빈곤율을 볼 때 문제고, 그분들이 그 세대가 이제 75세, 지금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 74세, 75세쯤 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시면서 빈곤률이 올라가거든요?</p> <p>지금 다른 세대들은 다 이미 그 연령을 넘었거나, 아니면 거기를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p> <p>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기초연금 줄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논의해 볼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p> <p>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걸 낮추자, 인하하는 걸 멈추자, 또는 42.5%를 45%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다 이제 미래 세대들이 연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보자라고 이야기 한 거거든요.</p> <p>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제도가 성숙할 때는 후세대가 가입기간이 늘어나가지고 평균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후세대 이제 가입기간 다 서로 거의 한 27년, 28년 다투고 있고,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만 떨어지고 있거든요.</p> <p>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초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더 가난한데 기초연금을 깎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p> <p>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계속 더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앞 세대보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국민연금을 더욱 적게 받는다.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25년 4월에 했던 소득대체율을 고정시키는 개혁은 사실은 최고값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p> <p>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43% 정도 되면 그 미래 세대 어떤 특정한 세대 다음 세대가 더 연금을 적게 받냐 아니냐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최소한의 작업은 했다.</p> <p>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p> <p>근데 박사님 발표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p> <p>유 박사님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제 공적연금이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좋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역할을 하게, 저는 이제 사실 빈곤층 이해하신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말고 공공부조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그런 그 이하 집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송헌재 위원님.
송헌재위원	<p>그래서 박나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p> <p>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노후소득보장을 해야 되는, 소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애 소득 주기가 있는 것처럼 생애 소비도 패턴이 있단 말이죠.</p> <p>이분들은 사교육비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한 소비 항목들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은.</p> <p>그러면 지금 유회원 박사님 아까 발표해 주신 40페이지 자료를 보면 노후소득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중위소득의 50%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하잖아요?</p> <p>과연 우리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위소득을 갖고 하는 게 맞냐 근본적으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p> <p>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빈곤율을 얘기하면서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보느냐? 소비다. 이분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 우리가 그래서 최저소득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p> <p>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나서 그런 점</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p> <p>그러니까 노인빈곤을 말고 대안 지표를 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p> <p>저도 지금 연구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지만 줄긴 줍니다. 그다음에 또 의료비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지만 별로 안 들어요. 비슷하게 가요.</p> <p>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이분들의 연령대 60대부터 70, 80, 90대, 이분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p> <p>그다음에 유희원 박사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이, 발표에 많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게 연금이라는 게 세대 간의 신뢰에 의해서 기반되는 거고 이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p> <p>그러면 저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맨 마지막 62페이지에 '세대 간 형평성은 질문 국민연금 지출은 단순 비용인가?'에 대해서 유희원 박사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후세대의 비용이 아니고, 제도의 역할 기능 강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p> <p>근데 사실 쉽게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p> <p>그러니까 이게 지출을 했어요. 지출을 했으면 소비 지출이나 비소비 지출이에요. 그쵸? 비용이잖아요? 근데 지출을 했는데 비용이 아닌 건 투자죠.</p> <p>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걸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투자라고 말하고 설득할 수 있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p> <p>그 투자라는 건 지금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p> <p>그래서 그런 논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p> <p>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박철언 위원님.
박철언위원	<p>네. 박철언입니다.</p> <p>그 데이터를 데이터, 팩트로 봐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두 분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 대안을 내주셨고, 저는 저와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저와 대안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희원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일단 저희가 정책이라는 거를 고려할 때, 정책에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p> <p>저희가 지금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또 국회로 넘어가야 되고 실제 행정부로 반영되려면 굉장한 시차가 생깁니다.</p> <p>저희가 3월에 국민연금법 개정될 때, 그게 약 20년 만의 개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것도 굉장히 시차가 있을 거고요.</p> <p>그러면 저희가 지금 논의의 전제로 노인빈곤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조개혁이 됐을 때, 지금 이 구조개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노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60대, 70대 분들일 건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p> <p>그러니까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70, 즉 노인에 이미 진입한 분들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를 텐데, 이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구조개혁의 대상이 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상이 됐을 때, 과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한 논의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시차가 지금 반영된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왜냐면 소득 대체율 증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고요.</p> <p>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을 강화를 하는 게 결국 미래 세대의 빈곤 강화를 이제 방지하는 방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공감합니다.</p> <p>공감하는데, 좀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있나?” 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p> <p>사실 저희가 오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얘기하는 거고 기금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 기금 얘기를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p> <p>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위원 분께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게 문제냐.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기금 그냥 뒤서 뭐하냐, 있는 기금 잘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금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계신지, 이제 국민연금 강화가 미래세대 빈곤 예방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논의를 마련해 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p>예, 위원장님.</p>
주은선위원장	<p>예. 저는 어떻게든 두 분 발표자 선생님 논의에서 좀 수렴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p> <p>저는 이제 이승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노인빈곤율, 상대 빈곤율이라는 게 결국 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표로서 갖는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p> <p>그래서 우리가 국민, 적어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상대 빈곤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의미가 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희원 박사님께서 이제 국민연금 이제 보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적정 필요 노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수준을 평가하고 또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p> <p>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국민연금의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제시를 할 때, 유희원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개념의 어떤 유용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희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p> <p>그다음에 이제 자산 빈곤율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제 논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도 자산을 포함하면 빈곤율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지는, 결국 이제 자산 빈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김원섭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고려해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국제 비교한 어떤 자료나 결과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p> <p>어쨌든 그리고 코호트를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노인빈곤에서 소득 절벽 이후의 연령효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p> <p>특히 한국같이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어떤 일정 연령대 이상, 특히 이제 70세, 75세 이상에서 연령효과는 매우 강력할 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게 혹시 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빈곤율 차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p> <p>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 급여 수준에 대해서, 두 분이 비슷한 추정을 하더라도 어찌면은 되게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유희원 박사님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연령대별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이제 쪽 추정해 놓은 게 나왔는데, 이승희 박사님도 아까 이제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게, 1950년대생 평균 60만 원 얘기를 하시면서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p> <p>근데 유희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20대에 받을 수 있는 액수, 27년 가입했을 때, 이제 아마 8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충분치 않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 다. 그래서 이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 두 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p> <p>유희원 박사님은 이제 젠더 격차도, 또 이제 사각지대도 또 얘기 하셨는데, 우리 보장성 강화 방안이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이 젠더 격차 보장성 문제에 있어서 젠더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유희원 박사님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승희 박사님.
유희원위원	질문들이 다 어려운데 간단하게 대답해야 해서 쉽지 않은.
박명호위원장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유희원위원	<p>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일단 국민연금에서 좀 이렇게 포괄하지 못하는, 정해식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포괄하지 못한 최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당연히 공공 부조가 가장 기본적인 1차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겠죠.</p> <p>그리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이제 그래서 저도 보충연금을, 물론 지금 기초연금을 아주 낮은 수준의 보충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빈곤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p> <p>그래서 이제 좀 정치하게 설계된다면 보충연금 같은 것들이 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 좀 간단히 드리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다음에 이제 송헌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위소득 50%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막 예시 이런 식으로 다 달려 있어요.</p> <p>그러니까 지금 우리 급여 수준이 이러한데, 이걸 어떤 지표들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죠.</p> <p>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선이 이제 중위소득의 50% 때문에, 한번 그것과 비교해서 적정성 목표도 한번 설정을 해본 거고, 그에 따른 각 제도의 역할들도 한번 구상을 해본 차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p> <p>그리고 좋은 말씀 주셨던 게, 제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저도 막 이렇게 정확하게 고민이 많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지출을 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p> <p>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의 선례들을 봐도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의 어떤 사적부양 책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저도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노후가 어느 정도 연금을 통해서 보장된다는 담보가 되면, 훨씬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하면서 좀 즐기는 청년기를, 청장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p> <p>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설득이 되는 얘기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박철언 위원님, 일단은 그, 또 빈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빈곤을 자체에 그렇게 크게 방점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 논의는 사실은 빈곤 얘기가 아니라 적정성 방안이었거든요? 노후보장방안이었거든요? 주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방안에 포커싱을 뒀고, 그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빈곤율, 또는 빈곤선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라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적정성 목표로 제시해 본 값이라는 걸 말씀드리고.</p> <p>그 시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의해서 또 10년, 20년 걸려버리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글썽요. 해 나가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돈이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정안정화 논의 과정에서 좀 많이 다뤄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논의 순서가 좀 뒤집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p> <p>그래서 이제 적정성 목표를 우리가 어쨌든 잡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각자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재정소요를 살펴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그런 논의가 앞으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p> <p>그다음에 이제 주은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산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추계 결과를 봐도 43% 소득대체율 하에서 이제 지금 20세, 즉 미래 세대들의 월평균 연금액이 A소득자 기준으로 한 8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높냐 낮냐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죠.</p> <p>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한 거고, 가장 낮게 보시는 분들은 그 국기초의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잡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낮아요. 그것보다.</p> <p>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좀 빈곤선으로 통용되는 그 지표랑도 한번 비교를 해 본 거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p> <p>어쨌든 그 빈곤, 그러니까 이 빈곤이 빈곤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미래에도 좀 충분치 않다라는 저는 결론을 그래서 내렸던 거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젠더 문제,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 이 국민연금의 어떤 적용 사각지대, 급여 사각지대 문제는 대부분 이제 좀 여성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p> <p>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개혁을 통해서 많이 이제 또 개선이 되기도 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추가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p> <p>그러니까 더군다나 자녀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녀당 좀 보장해 주는 기간을 지금보다 좀 늘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p> <p>또 한 가지는, 조금 이거는 약간 제도 설계와 관련된 건데, 국민연금이 현재는 그 가입구조 자체가 이 적용제외자를 좀 영역, 관리 영역 밖에서 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무소득 배우자들, 주로 여성들이죠.</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이분들이 어쨌든 제도 내로 좀 들어온다면, 그래서 관리의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홍보 유인책을 마련해서 가입자로 끌어들이면 이분들의 노후소득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p> <p>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입구조 개편 이런 방안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p>
이승희 박사	예. 이승희 박사님.
이승희 박사	<p>먼저 정해식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50년대 이후 출생 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74세 이상 돼서 은퇴했을 때, 과연 이런 빈곤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현재 빈곤율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좀 그런, 좀 자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데요. 특히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표가 하나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봤을 때, 고령층의 소득 중에 금융소득 비중이 OECD 평균 2배 수준입니다.</p> <p>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아무래도 교육 수준과 비례하게 되는데, 교육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산 같은 거에 투자 같은 것도 좀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p> <p>저는 이제 국민연금과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향후 한 10년 내에서 결국 이 소득과 자산 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p> <p>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이나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고령층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금융자산으로 디세이빙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부동산에, 소위 말해서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p> <p>그래서 결국은 나중 가면 결국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국민연금 내에서는 조금 더 이거랑 관련이 좀 적을 것 같고요.</p> <p>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20, 30년 뒤에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에서 국민연금이 좀 줄어들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빈곤율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실 다른 문제들,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저는 일단 오늘은 빈곤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리고 송헌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보다 사실 노인들의 어떤 소비 지출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특히 이 의료비 지출이 아무래도 건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커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의 실질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 소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40대, 50대 소비 지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게 보통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굉장히 커서 좀 약간 좀 특이한 특징이 있고.</p> <p>고령층 되서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p> <p>주은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령효과,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현재 1950년대 후반생들이 75세 이렇게 되서 노동시장에 완전히 퇴출하고 난 다음에는 연령효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떤 보유 규모를 봤었을 때는, 현재만큼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p> <p>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포함 국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제가 부록에 포함을 하긴 했는데요.</p> <p>이게 제가 페이지를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었는데, 거의 뒤에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득과 자산의 데이터로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용한 국가를 7개를 봤었는데, 이게 자산을 고려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높아지는데, 이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다면은,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이 자산을 좀 더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많다. 이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꼭 자산을 포함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감소하고, 감소하더라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리고 50년대생 평균이 꽤 높다 이거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통계를 사실 공단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 공단에서 그대로 준 것은 아니고.</p>
주은선위원장	높다는 그 얘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수준에 대한 판단, 박사님의 판단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박사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통계에서도 평균의 함정이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저는 일단 사용한 것은 그냥 이 세대별로 지출

발언자	의결본(최종)
	<p>총액이 나와 있었고 그거를 수급 인원을 나눠서 그냥 평균 급여를 구한 것인데요.</p> <p>이게 아무래도 가입기간에도 그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제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년대생이 이 수급하는 게 평균이 60만 원이긴 하지만, 이게 당연히 낮은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긴 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석명위원	추가질의를 짧게, 1분만, 30초만 하면.
박명호위원장	30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상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한 분 늘었네요. 신승룡. 예. 이쪽에 앉아 계신 네 분 하시고 윤석명 박사님 마지막. 근데 5시에는 못 끝납니다.
정세은위원	아니 뭐 더 한다면 저도 할 거예요.
박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박종상 위원님.
정세은위원	한 번으로 그냥 해 주세요.
윤석명위원	아니 왜 발언을 통제를 해요 지금.
박명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시간 늘어납니다. 박종상 위원님.
박종상위원	<p>네. 일단 두 분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p> <p>일단 먼저 이승희 박사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자산을 말씀하실 때, 총자산을 하셨는지 순자산을 하셨는지 그거 여쭙보고 싶었고요.</p> <p>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인데, 이철희 교수님, 그러니까 노동경제 하시는 분이 최근에 저출산 관련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니면 중기적으로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이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p> <p>이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출산의 위험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연관해서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오늘 회의에서 드는 특징은, 오히려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럼 노인들이 늦게까지 일해야 되겠냐, 너무 슬픈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깐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p> <p>그다음에 유희원 박사님 발표도 이렇게 잘 들었는데, 제가 하나 코멘트가 하나 있고,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러니까 62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송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의를 하면서, 근데 그 62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는, 거기서 이제 그 X축이 calendar year를 말씀하신 거잖아요?</p> <p>근데 그 안에는 calendar year에 들어 있는 숫자에는, 근데 그 62페이지의 전체 내용은 사실 세대 간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 간 형평성을 그 그래프로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p> <p>물론 이제 코호트별로 수익비만 보는 게 전부 다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80년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혜택을 받느냐는 다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로만 보서는 이제 세대 간으로 쪼개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p> <p>박사님께서 자료에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한데 왜 자동조정장치를 이제 벌써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보험료율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 보험료율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험료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p> <p>그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제 질문은 혹시 2025년 단행되었던 우리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 인상이 13%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질문.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p>예.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통계 오류에 빠지는 걸 굉장히 좀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신선한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p> <p>그리고 간혹 이제 얘기 듣다 보면 뭔가 개인 상황들을 자꾸 대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자녀 결혼하면서 부모가 대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돈 한 푼 안 받고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집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더 받고 싶다고 하면, 주택연금 받거나 집 팔아서 생활비 쓰면서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서 사시면 되죠. 너무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리고 이걸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유희원 연구원님께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데, 이게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납부 회피라는 게, 못 내는 사람들보다는, 못 내는 것보다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p> <p>저도 이런 현실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보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낼 수 있는데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p> <p>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는 사업주들한테 사실상의 혜택이 없어요. 그냥 그걸 적용받는 근로자들만 혜택이 있지.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서 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p> <p>이상입니다.</p>
박명호위원장	신승룡 위원님.
신승룡 위원	<p>예. 저는 이번 민간자문위가 다른 민간자문위 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 세대 할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저 자신을 2050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면서 생각하는데.</p> <p>여기에서 자꾸 세계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최악이다. 이것만 강조한다면 2050년생한테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p> <p>회의록이 다 공개될 테고, 30년 후에 그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p> <p>그렇지만 저는 1988년생이여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100% 다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래서 항상 노인 이제, 노인소득보장 얘기를 할 때는 이 재정지속성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뭐 빈곤율 최악이다. 맞습니다.</p> <p>심각한 이야기인데, 그것과 함께 출생률도 최악이다라는 걸 함께 고려해서.</p> <p>우리나라가 예산이 없습니다. 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출 효율화 해 가지고 이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야 올바른 바람직하기 노후소득보장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p> <p>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재정지속성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p>
<p>박명호위원장 정보영위원</p>	<p>정보영 위원님.</p> <p>네. 정보영입니다. 저는 연금보다는 이제 청년이나 노동시장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이승희 선생님이 발표를 듣다가 궁금해진 점이 있습니다.</p> <p>이제 노동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이제 50년대생 이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고르게 균등하게 동건했다면 이제 90년대생 코호트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코호트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기를 이끈 추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부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노동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말도 맞지만, 여전히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더 상황이 낫다고 생각, 맞는 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근데 이제 문제는, 발제하면서 이제 미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 세대를 보면 우리가 흔히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표준 고용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노동시장이 분자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한 측면도 있지만 빈곤해지는, 그러니까 불평등한 코호트가 점점 더 이제 세대 내의 불평등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p> <p>그렇다면 이제 이 미래를 고려했을 때, 빈곤이나 사각지대의 특성이 다를 뿐이지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p> <p>하나만 더 덧붙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경제 성장률 둔화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럼 중위소득도 이에 반영해서 천천히 증가되어야 할,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이게 더 나중에 반영이 되어서 중위소득이 분화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p>
<p>박명호위원장</p>	<p>예. 윤석명 박사님,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p>
<p>윤석명위원</p>	<p>네. 이제 발언 시작입니다. 이승희 박사님 오늘 굉장히 좋은 연구,</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많은 연구 들었습니다.</p> <p>우리가 쓰는 빈곤율 개념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가이드라인은 40%, 50%, 60%에서 골라 쓸 수가 있어요.</p> <p>근데 우리 노인들 교통비 공짜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OECD 회원국들보다 적다 보니, 우린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위소득이 굉장히 (1인당) 국가 GDP 대비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표를 좀 쓰실 의향은 없는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p> <p>그다음에 최저, 우리가 절대 빈곤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빈곤, 절대 빈곤도 같이 수치를 비교하면서 아시아 특정 국가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주은선 위원장님.
주은선위원장	<p>예. 이승희 박사님께서 이제 선별 보장 강화하는 대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표 보장 수준이 얼마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역시 유회원 박사님도 목표로 한 적정 보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그래서 두 분 얘기를 비교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질의는 이제 끝난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이승희 박사님 먼저.
이승희박사	먼저 그 박종상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순자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종상위원	부채 뺀다는 말씀이시죠?
이승희박사	<p>네. 맞습니다.</p> <p>그리고 신승룡 박사님 말씀에서 재정지속성, 당연히 이게 가장, 제도에 대해서는 뭐든지 재정지속성이 가장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이걸 뒤에서 주은선 교수님 답변 말씀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정보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 내 불평등 보장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 아니, 세대 내 불평등이 결국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제 현재 노동시장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대 간 불평등, 아니면 세대 간 이동성 세대 내, 세대 간 이게 종합돼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p> <p>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국민연금이 그럼 가장 좋</p>

발언자	의결본(최종)
	<p>은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p> <p>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중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일단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특히 중위소득이 그냥 우리 가금복에서 계산하는 실제 중위소득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현재 중위소득과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최근에 좀 일반적으로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서 조금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p> <p>실제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조금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p> <p>윤석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빈곤 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현물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에 대해서 혜택, 그런 교통제도라든가, 특히 어떤 의료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전반적인 고령층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데이터에 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이 사실.</p>
윤석명 위원	기준을 40%, 50%, 60% 쓰는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승희 박사	<p>네네.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OECD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베이스 라인을 잡아야겠지만, 40%, 60% 같이 보는 그런, 또 보조 지표적인 지표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p> <p>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지금 대부분 상대 빈곤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절대 빈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절대 빈곤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요즘, 최근 어떤 모던한 그런 인터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절대 빈곤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p> <p>그러니까 옛날에 뭐 보사연 박사님들 많이 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소비 바스켓을 통해서 최소소득, 제가 기억이 잘, 최저생계비를 2010년까지가 매년 하셨다가 이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p> <p>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의 이슈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더 접근해 봐야 하겠지만, 당장 활용을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리고 주은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목표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국민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p> <p>그러니까 결국 목표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빈곤선까지 책임을 지기에는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p> <p>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최저적인 어떤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p> <p>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제가 사실 계속 포커싱을 맞추는 것인데,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70%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고령층의 70%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부유한 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p> <p>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급 대상을 좀 줄이면서 그분들의 수급액을 좀 더 오히려 더 어려운.</p>
주은선위원장	기초연금 최대급여액을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승희박사	<p>그것도 이제 당연히 재정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액은 GDP 1%선까지 고정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으로 현재 재고에서 재정 지출이 얼마까지 될 것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얼마간 분배를 하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p> <p>예를 들어서 앞으로 2070년에 100조 원이 된다고 하면은, 요 지금 100조 원을 바탕으로 해서 누적된, 저희가 하고 있는 누적된 지출을 바탕으로 현재 세대가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그래도 한 50만 원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p> <p>근데 물론 이게 당연히 이 목표 보장 수준도 당연히 재정 지속 가능성이 당연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유희원위원	<p>박종상 위원 말씀 엄청 잘 들었고, 그 일단 그 지출 추이 가지고 당연히 세대 간 형평성 그걸로만 볼 수는 없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도 말씀하신 대로 섞여 있잖아요?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 섞여 있고.</p> <p>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게 세대 간 형평성을, 그게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사실 오래 살면, 예를 들어서 이득이고, 일찍 죽으면 손해</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유형 분산 기능 자체가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치환해서, 이제 좀 과잉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p> <p>그래서 이런 것만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다 보여줄 수 없다라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담 측면에서 이제 세대 간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연도별 지출 추이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p> <p>그다음에 보험료율 인상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국민연금이 적정기여, 적정급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OECD 평균, 지금 25년 자료 보면 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민연금의 어떤 기여 회피가 문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그런 정책 불응 문제에 대응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억지로, 본인이 원해서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소득이 안 잡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서 이제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사각지대가 작으면 모르는데, 다른 유럽 국가 처럼, 지금 36% 이 정도 되는 사각지대를 막 다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국민연금을 나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각지대 문제를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기여 회피 없애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수는 없잖아요?</p> <p>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쨌든 노후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그러면 이제 기여 회피 했던 인원들 중에서 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를 자연스럽게 좀 최소화하면서, 정말 안 되는 취약계층들에게 우리가 이런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지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사실 뭐 제가 이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라서 잘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한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일단 좀 포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공적연금보다는 낮아서,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소득대체, 소득유지 기능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p> <p>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적정성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재정안정성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도 또 제안할 수 있는데.</p> <p>우리가 사실은 이 적정성에 대한 개념이나 목표도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정안정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p> <p>어떤 분들은 제도 내에서 수지상등을 맞추는 걸 재정안정화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도 내에서 이런 사회 제도를 두고 제도 내에서 수지상등 맞추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른 제도 외적인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p> <p>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개념을 합의하고, 목표를 일치시키는 작업들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답변으로 제가 좀 같음하겠습니다.</p> <p>그리고 주은선 교수님께서 이제 적정성 목표도,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그 적정성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빈곤 예방 기능을 그냥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역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p> <p>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소득대체 기능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p> <p>그런 개념조차 합의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발제문에서도 간단히 썼지만, 적어도 생애의 대부분을 3, 40년을 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35년, 40년을 가입했으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좀 빈곤선 이상의 연금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p>예. 오랜 시간 발표하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p> <p>특히 먼데서 오신 우리 이승희 박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오늘 발제해 주신 유희원 박사님은 첫 연구년을 떠나신답니다. 영국으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그래서 아마 대면회의 자체가 이제 참석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셔서, 연구년 가시는 동안에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p> <p>예. 이제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차 회의록 확정된 이메일을 드렸었는데, 더 이상 수정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버전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럼 1차 회의록은 확정된 걸로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자료가 사전에 위원분들한테 공유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위원분들한테도 발표자료를 드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제자료 준비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제를 하실 분들은 좀 유념해 주셔서, 좀 시간을 당겨주신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분들이 미리 좀 읽어보시고 소화하고 오셔서 얘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윤석명 위원	<p>기존 발제자료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여기서 프린트물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자료들 공유를 지금 시켜주셨으면.</p>
박명호위원장	<p>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실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 아까도 우리 운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연말까지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하기로 했고, 저희가 계속 가기를 바라시지만, 개인의 사정상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p> <p>문제는 저희가 끝날 때쯤 되면 전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p> <p>그래서 여태까지 발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발제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이내로, 개조식으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간략하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p> <p>그래서 양식은 우리 행정실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p> <p>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인이 발제한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과 표를 넣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3페이지 내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거는 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6차 회의까지는 연금특위 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주제에 따라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p> <p>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논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위원분들에게 제안을 요청을 했고, 1차 제안 요청드렸던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2월 12일까지였고요.</p> <p>그러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은, 위원분들의 제안 사항들을 다 취합을 해서, 행정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공동위원장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1차적으로 오늘 회의 안에서 주제 안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논의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p> <p>이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최종 논의 안건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저희가 밟기로 했었고요.</p> <p>근데 12월 12일까지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향후 논의 안건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배포해 주시면</p> <p>박나리 위원하고 김원섭 위원 두 분이 제출해 주셨습니다.</p> <p>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저희가 주제안을 받은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제안들을 계속 받을 예정인데, 일단 한번 보시고, 여기서</p>

발언자	의결본(최종)
	<p>논의를 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동위원장한테 너희들이 어느 정도 타결을 보고, 타협을 보고, 그런 과정속에서 각 진영에 속한 위원분들하고 논의도 하시겠지요? 그래서 여야 간사하고 협의하는 안건을 만들어라라고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p> <p>아니면 원래 당초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2차 회의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회의 석상, 회의 안에서 향후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여기서 선정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특위 자문위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p> <p>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야 간사와의 협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p> <p>사실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이제 그게 어떤 논의의 재료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러니까 양쪽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가 만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p>
정 세 은 위 원	동의합니다.
김 원 섭 위 원	<p>제 생각은 시간이 좀 짧아서, 짧았어요. 다른 분들은 또 하고 싶은게 또 있을 건데 못 할 수 있으니까, 취합을 좀 더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두 분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간사 분들과 이야기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p> <p>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말씀하신, 어떤 주제인지 를 주셔야 위원분들이</p>
박명호위원장	<p>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안 받으셨나요? 운영안이라고 해가지고 1차 회의 때 드렸었는데, 혹시 1차 회의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메일 보낼 때, 발제 안건을 보낼 때 같이 좀 보내주시겠어요?</p>
김 원 섭 위 원	위원분들께서 추가적인 주제를 제안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석 명 위 원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말씀 좀
박명호위원장	말씀하시죠.
윤 석 명 위 원	지금 우리가 발표 주제를 정한 게 언제까지죠? 몇 월달까지죠?
박명호위원장	지금 6차까지니깐요. 2월 말까지? 2월 13일까지인가요?
주은선위원장	발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2월 13일 회의 발표 주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호위원장	일단 회의 날짜를 3월 첫 번째까지는 정한.
주은선위원장	<p>회의 날짜는 3월 27일까지 정해져 있고요. 근데 2월 13일? 2월 27일 발표 주제가 지금 비어 있어요.</p> <p>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정해서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p>
윤 석 명 위 원	이번 22대 국회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난번에 자동조정장치

발언자	의결본(최종)
	<p>도 뻘고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된 거 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는 그 부분에 좀 포커싱(Focusing)을 해야 될 것 같아요.</p>
<p>박명호위원장</p>	<p>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윤석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6차 회의까지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27일부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월 말에 정한다라는 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그걸 좀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몇 개의 주제라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달 가서 또 몇 개를 정하는 식,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윤석명위원</p>	<p>제 말씀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월까지 정해놓고, 그 뒤에 논의될 걸 충분히 논의해서 세팅하자는 겁니다.</p>
<p>박명호위원장</p>	<p>내년 3월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주제를 3개는 정해야 돼서, 그거는 12월달 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또 다른 위원분들 의견 계신가요?</p> <p>지금 주은선 위원장님하고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위원장끼리 상의를 하고, 물론 그 안에 여러분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의도 해보고,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도 한번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제가 정해진다고 했었을 때 지금처럼 생각이 다르신 측에서 한 분씩 발표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는 꼭 양측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p> <p>해외 사례를 파악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단일 주제로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좀 논의를 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25분 정도 오버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차 회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p>